해수부 광양항 개발규모 40% 축소

해양수산부가 광양항 개발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용역안을 발표, 정부가 추진해 온 부산·광양항 동반 개발인 양항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투포트는 말장난… 결국 부산항 집중

〈양항정책〉

대통령까지 나서 개발 변경 없다더니…
원포트 시스템 선회…광양항 미래 암울

26일 해수부가 발표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 결과'의 핵심 골자는 물동량을 이유로 한 광양항 개발 축소로 요약된다. 반면 부산항 개발은 광양항과 달리 거의 개발 계획을 그대로 추진키로 해 광양항과 큰 대조를 이뤘다.

결국 1980년대 이후 정부 항만정책의 기조였던 광양·부산항 동반개발 정책인 양항(兩港) 정책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부산항에 우리나라 물류 역량을 집중시키는 사실상의 '원포트 시스템' 추진을 의미한다.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는 항만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대 해수부장관의 '치고 빠지기식' 발언에서 이미 감지됐다. 역대 장관들은 광양항을 부산항과 동시에 개발하는 양항 정책, 즉 투포트(Two Port) 시스템이 정부 정책의 기조라고 확인하면서도 이른 바 '국제 경쟁력'을 빌미로 수차례 말을 바꾸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발언이다. 오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1월 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광양·부산항 물동량을 분석한 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대적으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던 광양항의 축소 개발을 암시했다.

이 발언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큰 파문이 일자 그는 채 일주일도 못돼 말을 바꿨다. 지역 반발이 커지자 같은 달 11일 급히 여수에 내려온 오 전 장관은 "광양항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확약하면서 불끄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오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14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국내 선사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또 다시 부산항 집중육성의 속내를 드러냈다. 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 선수(항만) 하나만 키워야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말로 다시 원포트 시스템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 취임한 김성진 현 해수부 장관도 올 5월 8일 광양을 방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포트 시스템은 확고하다"는 말로 정부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하버포럼에서 "양항체제가 중요하며 그 중심은 부산항"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역대 장관들의 양항정책에 대한 발언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면 누구랄 것 없이 양항정책을 강조하지만 그 이외 지역이나 외국에서는 예외없이 부산항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이다.

광양항 관련 정부 인사 발언내용

일 시	행 사	내 용
2003년 4월 23일 허성관 해수부 장관	광주·전남 비전21 토론회	"투포트시스템(광양·부산항)의 정부정책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믿고 지켜봐 달라"
2005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광양항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 낼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계획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도록 하라"
2005년 9월 14일 오거돈 해수부 장관	싱가포르 국내선사 대표 간담회	"대표선수(항만)하나만 키워야 국제경쟁력 있다."
2006년 5월 8일 김성진 해수부 장관	광양 기자 간담회	"투포트 시스템 원칙 확고하다"
2006년 6월 16일 김성진 해수부 장관	부산 제1회 하버 포럼	"양항체제가 중요하며 그 중심은 부산항"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방문 시에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 양항정책을 역설했지만 일단 지역을 벗어나면 부산항에 물류 역량을 집중하는 원포트 시스템이 사실상 정부 방침임을 강조하며 애드벌룬을 띄우는 '이중플레이'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해수부의 방침에 따라 광양컨테이너항 선석이 당초 개발계획보다 줄고 공기도 늦어지게 된다면 광양항은 국내외 물동량 영향으로 크게 침체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광양항은 지난해 중국 상하이 양산 심수항 개항과 부산신항 개장으로 국내외 물동량 확보난을 겪는 등 당분간 어려움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은 지난 2005년 처리한 물동량 143만8천TEU(1 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해 2004년의 전체 처리물동량 132만TEU를 상회했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광양항을 거쳐 유럽 등으로 운반되는 환적물량 비율은 2005년 24%(34만2천TEU)로 1년 전의 환적량 비율 27%(35만6천TEU)보다 3%P줄어 양산항 개항의 여파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부산신항 정상화를 위해 국내 물동량의 쏠림현상까지 발생한다면 광양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투포트 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물류정책과 광양항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절실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컨테이너 선석 개발 계획 및 변경안 (단위:개)

	2001년 기본계획	2006년 기본 계획 정비안(잠정)		
	(A)2002-11년 전망	(B)2002-11년 전망	B-A	2002-2015 전망
광양	33	20	-13	21
부산	33	30	-3	33
인천	9	12	3	19
평택·당진	4	8	4	15
대산	2	1	-1	1
군산·정항	4	2	-2	3
목포	4	3	-1	3
마산	3	4	1	4
울산	4	4	0	4
포항	4	2	-2	4
계	96	82	-14	107

※변동없는 항은 표에서 표기하지 않았음

"집단급식 기본법 제정하자"

국회 보건복지위 급식대란 늑장대응·관리체계 질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에 대한 원인을 놓고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사고가 커졌음을 지적하면서 집단급식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사고 원인균으로 지목된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가 식중독 원인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노로 바이러스 검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노로 바이러스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전염병으로 지정됐다"면서 "공전(점검 항목)에 들어가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시민 보건복지장관도 "광우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소의 뇌를 절개해보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노로 바이러스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전에 넣어도 규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의원은 또 ▲식자재 납품과 조리·배식 분리 ▲대기업 전횡 방지 ▲급식처별로 제정된 관련법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급식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초 사고일에서 일주일이나 지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늑장대응을 한 만큼 원인 규명에 실패할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유 장관은 '늑장 대처' 지적에 대해 "16일 염광정보고 사고가 난 뒤 나흘간 아무런 식중독 발생 보고가 없어 가끔 학교 단위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했고 21일과 22일 일어난 사고와 연관됐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며 "16일 사고가 일어났는데 22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또 "염광정보고 사고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원인이었고 21일과 22일 사고는 대부분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두 사고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국회도 이번 사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안명옥 의원은 "학교급식 관련법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상황도 이번 사태의 원인인 만큼 사학법 논쟁으로 관련 상임위를 파행시킨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복지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제안했다.

교육위에서 옮겨온 백원우 의원도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 직영급식 비율이 높아졌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소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만큼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주문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민주와 연합공천"

우리당 호남·수도권 의원들 중심 공론화 시도

7·26 재·보궐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론을 둘러싼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연합공천을 해봤자 재·보선 전망이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당내 다수의 관측과, 연합공천론이 정계개편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는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호남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도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집요한 공론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김근태 의장이 25일 밤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시·도 당위원장 만찬 간담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연합공천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의 한 초선의원은 26일 "연합공천이든 단일공천이든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괜찮은 후보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방안인 것 같다"고 가세했다.

특히 연합공천 찬성론자들은 성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민주당과의 통합론이나, 민주개혁세력대연합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 연합공천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합공천론이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비대위 체제를 흔들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공천론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계개편 논의는 정기국회 이후에 하자고 한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우리당이 민주당과 연합공천을 하지 않아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얼마남지 않은 재·보선까지 당의 전열을 전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연합공천론 공론화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주요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연합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우리당 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성북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공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거부감이 덜한 후보를 선택한다면 연합공천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